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상담 74%, AI가 맡았다… 전산업무에 첫 특승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AI업무혁신TF'를 신설하고,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시범 도입한 'AI국세상담' 개발에 기여한 직원 2명을 특별승진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국세상담' 서비스를 시범 개시했다.

'AI국세상담' 서비스 도입 후 국세상담전화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6%에서 올해 98%로 대폭 늘었다.

상담 서비스 제공건수도 142만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했다. AI 상담사는 이중 74%(106만건)를 처리했다.

AI업무혁신 TF는 ▲AI 혁신업무 총괄·AI 시스템 및 기술지원 ▲부가·소득 등 AI지원 ▲원천·법인·자산 등 AI지원으로 나뉜다.

TF는 AI국세상담 서비스를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으로 확대하고, 일선 세무서 전화문의와 관련한 납세자 편의 개선에 나선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중산층 상속세 감세… 재벌 상속세 감세 받아야 가능

국민의힘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추진 중이며, 할증과세 폐지 시 최대 수혜자는 국내 대형 재벌들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9900만원 임을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상속세는 더 가혹하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대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에서 상속세 감세를 추진 중이나, 타깃은 상속세 하단인 중상층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현 유산

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종부세 감세에 나섰다가 당내 반발로 '공식적으로 종부세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당내 반발에 물러선 것을 지적하며, "상속세 개편만큼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구리정광 내년부터 수출 차단… 세율 7.5% 부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리 정광(불순물을 제거한 구리 광석) 수출 금지를 내년으로 적용하고, 수출세는 7.5% 부과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인도네시아 등을 인용,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구리 제조 회사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에 구리 정광 수출을 연말까지 허용하고, 수출세도 당초 최고 15%에서 7.5%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각종 원자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후방 산업(다운스트림)을 키우겠다는 2020년 차량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원광 수출을 막았고, 지난해에는 보크사이트 수출도 막았다. 또 구리 정광과 철, 납, 아연 광물 수출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구리 정광을 처리할 제련소 건설이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늦어지면서 구리 정광 수출 금지령을 올해 6월로 미뤘고, 대신 올해부터 최고 15%의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요 업체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이 투자한 대형 구리 제련소가 동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자 다시 올해 말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고, 수출세도 7.5%로 완화했다.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6위 구리 생산국으로, 전 세계 점유율은 4% 수준이다. 주로 구리 정광 형태로 수출해 전 세계 구리 제련소의 주요 원료 공급원이다. 이 때문에 구리 제련소들은 인도네시아가 구리 정광 수출을 금지할 경우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